

북한 SLBM 발사와 한국군의 자강전략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 요약 >

최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모의탄 수직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2~3년 이내에 북한이 실제 SLBM을 개발 전력화한다면, 기존 남북한 간 군사전략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SLBM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강전략(새로운 군사전략 및 수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핵심은 그동안 군 지휘구조 개편, 신무기체계 획득, 예산확보 등에 가려져 왔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쟁억지 및 군사전략의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및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청와대 차원의 적시적인 안보 및 국방정책·전략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합참 차원의 '합동전략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천연의 방어막으로 불리는 수중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수함, 특히 원자력 추진체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北 SLBM 시험발사로 주변국 해양 군비경쟁 가속화될 것

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 잠수함(2,000~2,500톤급으로 추정)에서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 사출하는 시험 발사를 단행하였다. 김정은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칭찬한 것으로 보아, 1~2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 운용하기 위한 수직발사장치의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경,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의 존재가 최초로 포착된 이래, 2014년 11월 지상발사 시험, 2015년 2월 해상발사 시험 이후 거의 3개월여 만에 수중발사 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북한의 SLBM 기술개발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시험발사가 아직까지 SLBM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거나, 혹은 초기 전력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3대 핵탄두 운반체인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운데, 전략폭격기를 제외한 다른 운반수단들에 관련된 기술능력을 아주 단기간에 확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SLBM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으로 쉽게 탐지되는 ICBM과는 달리, 그 어떤 무기체계로도 그 징후를 포착 및 추적해 타격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그것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장착할 경우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최대의 안보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은 이번 SLBM 모의탄 사출시험 발사 성공에 고무 받아 실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해서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남태평양 상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 및 미본토까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것이고, 이로 인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해양 군비경쟁은 더 가속화되어 나갈 것이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해 위협을 가해올 경우, 한국군에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사실상 없다. 고작해야 P-3C 해상초계기나 해상작전 헬기 등을 통해 잠수함을 추적하는 정도의 능력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2015년 5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킬 체인(Kill-Chain: ISR+ C4I+ PGMs)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는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주 타깃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올 경우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다.

北 SLBM 시험발사, 우리에게서 군사 전략상 패배 안겨 준 것

이런 점에서 북한의 SLBM 모의탄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에게는 군사전략상의 승리를, 남한에게는 군사전략상의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5년 5월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가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이는 SLBM 위협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처럼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북한의 SLBM 기습공격을 받은 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타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응수단이 전혀 없는 데도 말이다.

사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 운반수단들을 개발하고 시험할 때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비밀리에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 및 수단 또한 착실해 마련해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육·해·공군 간 나눠 먹기식 재래식 전력증강에만 몰두하면서 SLBM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등한시 하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대비태세상의 큰 취약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2~3년 이내에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남북한 간 전략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한반도 전쟁발발 시 미중원군 파병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주일 미군기지가 타격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전쟁지속능력(예: 후속군수지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유사시 북한이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경우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적으로 그동안 군 지휘구조 개편, 신무기체계 획득, 예산확보 등에 가려져 왔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쟁역지 및 군사전략의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해 야전배치 시켜 놓아도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전술적 기민성’(tactical agility)에 관련된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 이제 자강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국방·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해 온 것은 무기, 병력을 비롯한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력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전쟁대비 및 기획, 지도 기능에서도 그동안 한국군은 높은 대미(對美) 의존도를 면치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건국 이후 한국이 치렀던 대규모의 전쟁은 지난 1950~1953년의 6·25 전쟁, 1965~1973년의 베트남 전쟁이 전부다. 이들 가운데 6·25 전쟁은 미군의 작전지휘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유지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단·군단급의 대부대 작전은 총 30회(군단급 4회, 사단급 26회)로 57만회가 넘는 전체 작전수행 횟수에서 불과 0.2% 이하에 그쳤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작전은 중대급 이하의 소부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한국군은 지난 1994년 12월을 기하여 평시작전통제권 (데프콘 4 기준)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대비와 기획, 지도를 위한 주요 핵심권한들은 여전히 ‘연합권한 위

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평시에도 한미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최고 군령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획, 수행보다는 평시의 관리임무 (예: 평시대비태세의 조절, 주요부대의 실전훈련 주관, 전투준비태세의 유지 및 검열, 주요부대의 이동,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비롯한 평시경계 임무 등)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국군은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야전군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의 실전 육·해·공, 그리고 합동작전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규모를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그동안 미군에 의존해왔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도 명실상부하게 '한국방위의 한국화', '전쟁억지 및 승리능력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자강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대북억제전략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자주적인 전쟁억제전략 단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우리 군의 개별적 자위역량을 증가시킴으로서 주한미군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및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청와대 차원의 적시적인 안보 및 국방정책·전략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전략 환경 변화를 6개월 단위로 검토해 적어도 2~3년 단위의 전략지침서를 국방부 및 합참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분쟁의 '전 스펙트럼'(full-spectrum)에 걸쳐 군사전략상의 '임무영역'을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군사력 사용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구능력) 등에 대해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에서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합동개념 → 능력기반평가 → 소요기획 → 개발 및 획득에 이르는 하향식 의사결정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명확한 전략지침에 입각해 국방부 및 합참에서 합동군사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게 되면, 현재 한국군의 군 구조 및 무기체계 획득에 관련된 전략·전술적, 그리고 운용적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합참차원의 '합동전략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위협 및 능력 옵션들(options)을 분석하는 능력은 국방부, 합참보다는 각 군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나 각 군은 그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data)와 모델(model)을 활용한 분석능력은 뛰어나겠지만, 합동전략 분석능력은 부족하다. 사실 각 군차원에서 분석한 위협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각 군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청와대, 국방부, 합참과 같은 상위기관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의 직접적 사용자이며 소요창출기관인 합참은 중장기적으로 자체의 '소요제기' 및 '전투실험'을 담당할

조직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 워게임(war game) 모의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과학적 검증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전력소요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어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 단계로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의 합동작전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또 분석수단, 특히 전면전과 같은 전투결과뿐만 아니라, 비정규전 및 대량파괴무기의 영향과 같은 광범위한 군사적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기반획득’(SBA: Simulation-Based Acquisition)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해 어떻게 싸우고,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라는 명제에 의해 설정된 개념에 따라 미래 요구능력을 설정하고, 개념과 요구능력에 대해 타당성과 요구능력의 달성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개념의 보완, 혹은 새로운 개념의 개발, 새로운 대비능력의 개발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합동전략 분석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의 제도화를 조속히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천연의 방어막으로 불리는 수중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보완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방부차원에서는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체계 도입, 그리고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장비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은밀하게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의 작전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단언컨대 잠수함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사실 자항기뢰와 잠수함박에 없다. 특히 잠수함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잠수함, 특히 수중에서 수개월동안 물밖으로 나오지 않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체계 잠수함을 획득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만약 원자력 추진체계 잠수함을 이용한 대잠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면 수상함이나 대잠항공기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존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 더하여 원자력 추진체계 잠수함까지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잠수함의 출항통제, 수상함에 대한 수중방어, 해상교통로를 파괴하는 잠수함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수중에서 작전활동을 펼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책제안 >

- ◆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그동안 미군에 의존해 왔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도 명실상부하게 ‘한국방위의 한국화’, ‘전쟁억지 및 승리능력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자강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남북한 및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청와대 차원의 적시적인 안보 및 국방정책·전략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 ◆ 둘째, 이런 전략지침에 근거해 합참차원에서는 독자적인 합동군사전략 수립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동군사전략 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 셋째,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의 제도화를 조속히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천연의 방어막으로 불리는 수중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